



보도 일시	2026. 4. 16.(목) 12:00 <4. 17.(금) 조간>	배포일	2026. 4. 15.(수)
담당 부서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담당자	박준용 팀장(043-880-5821) 박현지 대리(043-880-5824)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증가, 소비자 주의 필요

온라인을 통한 해외 제품 구매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도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해외 직접구매 금액(통계청): ('23년) 6.8조 → ('24년) 8.0조 → ('25년) 8.5조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총 1,396건(재유통 570건 포함)에 대해 유통차단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 최근 3년간 해외 리콜 제품 시정조치 현황: ('23년) 983건 → ('24년) 1,336건 → ('25년) 1,396건

□ 국내 유통 처음 확인된 해외리콜 제품 826건 시정조치

총 1,396건 중 국내 유통이 처음 확인되어 시정조치(유통차단, 표시개선 등)한 실적은 826건으로, 전년(577건) 대비 43.2%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가 28.3%(234건)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19.7%(163건), '화장품' 12.1%(100건) 순이었다. 특히 '화장품'은 전년 대비 3배 이상(244.8%) 증가했다. 해외 화장품에 대한 구매 수요 증가로 인해 일부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시장 유입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품목별 시정조치 현황 >

(단위: 건, %)

구분	품목	25년(A)		24년(B)		증감(A-B)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증가율
1	가전·전자·통신기기	234	28.3	149	25.8	85	57.0
2	음식료품	163	19.7	155	26.9	8	5.2
3	화장품	100	12.1	29	5.0	71	244.8

□ 주요 리콜 사유는 '전기적 위해요인'·'유해·화학물질 등 함유', 중국산 제품이 많아

품목별로 리콜 사유를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감전 위험 등 전기적 위해요인이 30.8%(72건)로 가장 많았고, 유해·화학물질 함유 [27.4%(64건)], 과일·발연·발화 등 화재 위험[22.2%(52건)]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음식료품'은 유해·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가 68.7%(112건), '화장품'은 유해·화학물질 함유가 62.0%(62건)로 대부분이었고, 이어서 이물질 함유가 21.5%(35건), 부패·변질이 3.7%(6건)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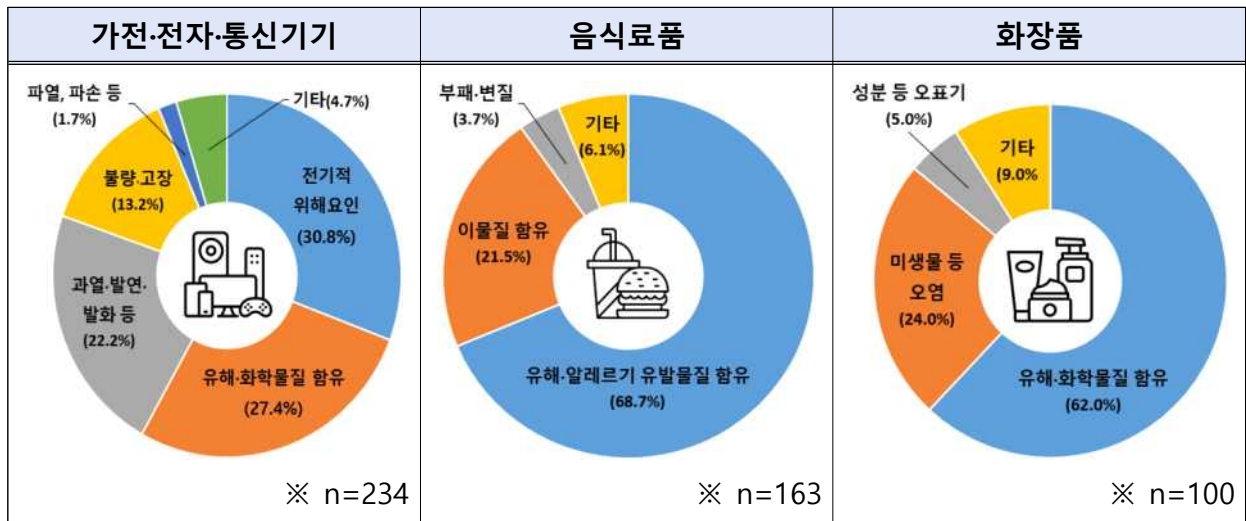
'화장품'은 유해·화학물질 함유가 62.0%(62건), 미생물 등 오염이 24.0%(24건), 성분 등 오폐기가 5.0%(5건)로 나타났다.

주요 해외리콜 사례

- ❶ (가전·전자·통신기기) 충전기 어댑터의 전류가 외부로 흘러 감전될 위험
- ❷ (음식료품) 곡물(귀노아) 가루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곰팡이 독소(아플라톡신) 검출
- ❸ (화장품) 향수에 사용이 금지된 위해 우려 원료(HICC*) 함유

*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향료로서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

< 주요 품목별 해외리콜 사유 >



해외리콜 제품 826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536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62.0%(332건)로 가장 많았고, 일본산이 6.5%(35건), 미국산이 5.6%(30건) 순이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중국산(96.5%), '음식료품'은 일본산(33.3%), '화장품'은 미국산(16.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재유통된 차단 제품 570건 추가 차단 조치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재유통될 수 있어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차단 제품 재유통 방지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2025년도 재유통 차단 건수 비중은 직전년도('24년) 대비 16%p 감소한 570건으로 나타났다.**

*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오픈마켓(4개사), 중고거래 플랫폼(4개사), 해외 온라인 플랫폼(2개사)과 체결

** 전체 시정조치 건수 중 재유통 차단건수 비중: ('24년) 758건(56.8%) → ('25년) 570건(40.8%)

한국소비자원은 올해에도 해외 위해물품 유입 방지를 위한 범정부 협의기구인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의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유통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는 등 해외 위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간사)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누리집 등에서 해당 제품의 해외리콜 여부를 확인할 것, ▲해당 국가의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할 것, ▲배송받은 제품의 손상·오염 등 상태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붙임 1.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2. 위해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유관기관·사업자 협력 현황

3. 소비자 주의사항

물품 등의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제보 혹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해정보 신고]

- (홈페이지) www.ciss.go.kr에서 '위해정보 신고하기' 클릭
- (핫라인) 국번없이 080-900-3500



위해정보 신고



1 ‘25년 해외리콜 제품 전체 시정조치 현황

□ ‘25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에 대해 826건을 시정조치(유통차단, 표시개선) 하였고, 유통차단된 해외리콜 제품의 재유통을 570건 차단하여, 총 1,396건을 시정조치하였음.

< 해외리콜 제품 시정조치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25년(A)	2024년(B)	증감(A-B)
해외리콜 제품 시정조치	유통차단	824	577	247
	표시사항 개선	2	-	2
소계		826(59.2)	577(43.2)	249 (43.2)
재유통 차단		570(40.8)	759(56.8)	△189 (△24.9)
계		1,396(100.0)	1,336(100.0)	60 (4.5)

2 시정조치 제품 품목별·리콜사유별·제조국별 현황

□ (품목별) ‘가전·전자·통신기기’가 가장 많았고(28.3%, 234건), ‘음식료품’(19.7%, 163건), ‘화장품’(12.1%, 10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화장품’은 전년 대비 3배 이상(244.8%) 증가해 증가폭이 두드러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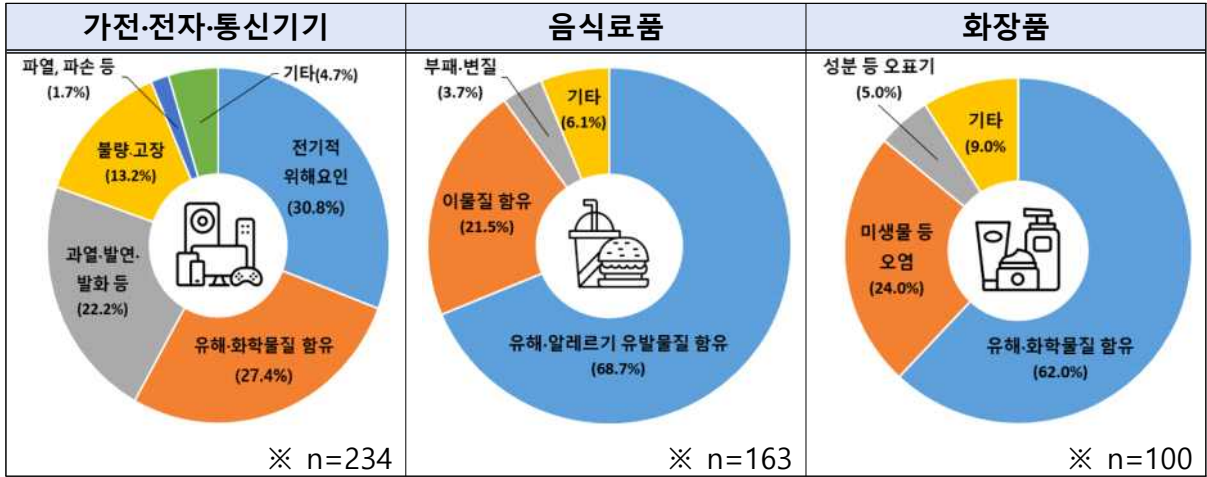
< 품목별 시정조치 현황 >

(단위: 건, %)

품목	25년(A)		24년(B)		증감(A-B)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증감률
가전·전자·통신기기	234	28.3	149	25.8	85	57.0
음식료품	163	19.7	155	26.9	8	5.2
화장품	100	12.1	29	5.0	71	244.8
생활·자동차용품	94	11.4	48	8.3	46	95.8
아동·유아용품	94	11.4	84	14.6	10	11.9
스포츠·레저용품	60	7.3	50	8.7	10	20.0
의류·패션용품	41	5.0	21	3.6	20	95.2
생활화학제품	30	3.6	31	5.4	△1	△3.2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6	0.7	3	0.5	3	100.0
기타	4	0.5	7	1.2	△3	△42.9
계	826	100.0	577	100.0	249	43.2

□ (리콜 사유별) 상위 3개 품목의 주요 리콜 사유를 살펴본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전기적 위해요인이 30.8%(72건), '음식료품'과 '화장품'은 유해물질 등 함유가 각각 68.7%(112건), 62.0%(62건)로 가장 많았음.

< 주요 품목별 해외리콜 사유 >



○ (가전·전자·통신기기) 감전 위험 등 전기적 위해요인이 30.8%(72건), 유해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가 27.4%(64건), 과열·발연·발화 등 위험이 22.2%(52건)로 나타남.

- 전기적 위해요인으로 리콜된 '가전·전자·통신기기' 중에서는 접지 및 절연 등이 미흡해 감전 위험으로 리콜된 제품(33건)이 가장 많았음.

○ (음식료품) 유해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가 68.7%(112건), 이물질 함유가 21.5%(35건), 부패·변질이 3.7%(6건)로 나타남.

- 유해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중에서는 라벨에 미표시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우유, 대두, 땅콩, 밀 등)이 함유되어 리콜된 식품(40건)이 가장 많았음.

○ (화장품) 유해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가 62.0%(62건), 미생물 등 오염이 24.0%(24건), 성분 등 오표기가 5.0%(5건)로 나타남.

- 유해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로 인해 리콜된 '화장품' 중에서는 사용 금지된 원료인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함유로 리콜된 제품(14건)이 가장 많았음.

* (HICC) 알레르기 반응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향료로서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

□ (제조국별) 826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536건 가운데 중국산 제품이 가장 많았고(62.0%, 332건), 일본산(6.5%, 35건), 미국산(5.6%, 30건) 등 순이었음.

* 해외리콜 수집기관 원문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조국(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 품목별 제조국 현황 >

(단위: 건, %)

품목	제조국				계
	중국	일본	미국	기타*	
가전·전자·통신기기	166 (96.5)	-	2 (1.2)	4 (2.3)	172
화장품	-	4 (5.4)	12 (16.2)	58 (78.4)	74
음식료품	4 (5.8)	23 (33.3)	11 (15.9)	31 (44.9)	69
생활·자동차용품	55 (84.6)	3 (4.6)	-	7 (10.8)	65
아동·유아용품	63 (96.9)	-	-	2 (3.1)	65
스포츠·레저용품	33 (80.5)	-	-	8 (19.5)	41
생활화학제품	2 (9.1)	-	4 (18.2)	16 (72.7)	22
의류·패션용품	5 (27.8)	-	-	13 (72.2)	18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	5 (83.3)	1 (16.7)	-	6
기타	4 (100.0)	-	-	-	4
계	332 (62.0)	35 (6.5)	30 (5.6)	139 (25.9)	536 (100.0)

* 중국, 일본, 미국을 제외한 30개 국가(프랑스, 베트남, 독일 등)

- (중국산) 품목별로는 중국산 ‘가전·전자·통신기기’(96.5%, 166건), ‘아동·유아용품’(96.9%, 63건)이 각 품목의 90%를 상회함.
- (일본산) ‘음식료품’ 중 일본산 제품이 33.3%(23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미국산) ‘화장품’ 중 미국산 제품이 16.2%(12건)로 가장 많았음.

3 시정조치 제품 재유통 차단조치 현황

□ (품목별) 시정조치된 제품의 재유통이 확인되어 차단한 내역(570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가장 많았고(32.6%, 186건), ‘아동·유아용품’(17.2%, 98건), ‘스포츠·레저용품’(12.3%, 7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품목별 재유통 차단조치 현황 >

(단위: 건, %)

품목	25년(A)		24년(B)		증감(A-B)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증감률
가전·전자·통신기기	186	32.6	299	39.4	△113	△37.8
아동·유아용품	98	17.2	96	12.7	2	2.1
스포츠·레저용품	70	12.3	93	12.3	△23	△24.7
음식료품	56	9.8	114	15.0	△58	△50.9
화장품	52	9.1	20	2.6	32	160.0
생활·자동차용품	51	8.9	70	9.2	△19	△27.1
의류·패션용품	38	6.7	14	1.8	24	171.4
생활화학제품	16	2.8	30	4.0	△14	△46.7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2	0.4	7	0.9	△5	△71.4
기타	1	0.2	16	2.1	△15	△93.8
계	570	100.0	759	100.0	△189	△24.9

- (가전·전자·통신기기) 감전 위험으로 인해 캐나다에서 리콜되었던 USB 어댑터(36건)가 가장 많았음.
- (아동·유아용품) 어린이가 소형 전지를 삼킬 우려가 있어 프랑스에서 리콜되었던 코스튬 의상(31건)이 가장 많았음.
- (스포츠·레저용품) 최고속도 기준 위반으로 영국에서 리콜되었던 산악용 전기자전거(16건)가 가장 많았음.

1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 노력 강화

- 해외 위해물품의 국내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9개 정부 부처·기관이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20.3.~).

* 공정거래위원회(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간사)

- 참여기관 확대를 통한 감시 품목 다양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위해요인 조기 발굴·차단·제도개선**까지 유기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 개요 >

- (목적) 해외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 차단 및 모니터링 사각지대 보완
- (참여부처·기관) **공정거래위원회(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간사)
- (주요 논의사항) 국내 유통되는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합동 감시·공동조치, 참여기관 간 정보 공유, 해외 위해물품 관리를 위한 국내 제도개선 검토 등

2 사업자 주도의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 오픈마켓***, **중고거래 플랫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체결한 ‘**자율 제품안전 협약**’에 따라 해외 위해제품의 유통·재유통을 차단 중임.

* 네이버(주), 십일번가(주), (주)지마켓, 쿠팡(주)

** (주)당근마켓, 번개장터(주), (주)중고나라, (주)헬로마켓

***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웨일코 코리아(테무)

- 협약사항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이행 가이드 마련 및 운영**, **자율 모니터링 확대**, **재유통 모니터링 주기 단축** 등 사업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차 강화할 예정임.

3 리콜정보 수집 및 공개

- 유럽,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 49개 국가, 37개 식품·제품 안전 유관기관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외리콜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있음.

< '25년 해외리콜정보 주요 수집 국가 및 기관 >

구분	국가	기관(사이트)명	구분	국가	기관(사이트)명
1	유럽 연합	EC(Safety Gate) 등	6	호주	ACCC, TGA 등
2	미국	CPSC, FDA, USDA 등	7	프랑스	Rappel Consommateur
3	캐나다	Health Canada 등	8	독일	BAuA, BVL
4	영국	CTSI, OPSS, FSA	9	중국	DPAC 등
5	일본	METI, CAA, NITE 등	10	뉴질랜드	FSAZN, MBIE 등

-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정보와 국내 유통이 확인되어 조치한 결과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 가능함.

누리집	리콜 정보 게시	조치 결과 게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위해정보 알림 - 해외리콜 수집정보	위해정보 알림 - 위해정보 처리속보
소비자24	해외직구정보 - 해외리콜 정보	소비자정보 - 위해정보 처리속보

해외직구·구매대행 시 소비자 주의사항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품은 국내 안전 인증·검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사용 시 주의하세요.

- ✓ 구매 전 제품 정보와 사용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기
- ✓ 배송된 제품의 손상·변형, 부패·변질 여부 확인하기



가급적 해외 각국의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세요.

- ✓ 유럽 CE, 중국 CCC 등 인증 정보를 확인하기



구매하려는 제품이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하세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바로가기



소비자24 바로가기



국내에서 사용이 제한된 위해(우려)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마세요.

- ✓ 식재료품 :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 ✓ 화장품 : 사용제한 원료



식품안전나라 바로가기



의약품안전나라 바로가기